

얼어붙은 체감경기...광주·전남 모든 업종 악화 전망

광주상의 47개사 조사...상반기 회복 전망 기업 한 곳도 없어
미 관세폭탄·조기 대선 정치 불확실성 소비 심리 위축 장기화
광주·전남 취업자·고용률 줄고 실업률 치솟아 ‘고용 한파’ 지속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여파로 광주·전남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지역 소매·유통 업계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 감소와 소비 시장 둔화를 예상하고, 조기 대선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요전대 댈진격으로 ‘고용한파’ 역시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줄었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 47개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지수(RBSI·Retail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지난 분기(85)보다 하락한 72를 기록했다.

RBSI는 유통 업체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인데,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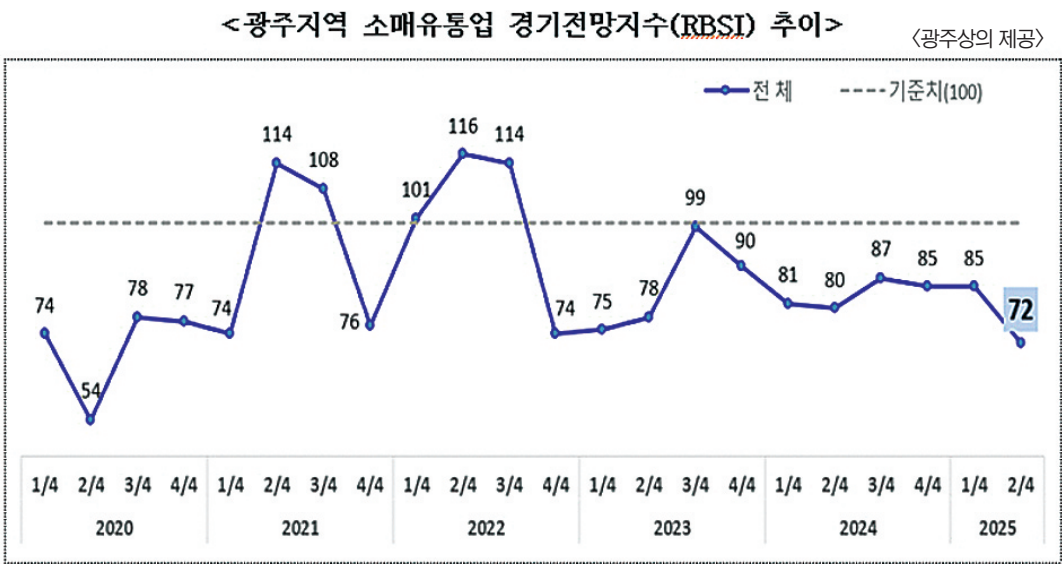
체감 경기는 2022년 3분기(114) 이후 11분기 연속 기준치보다 낮았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 소매·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분기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57.4%)을 꼽았다. 이어 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46.8%), 인건비·금융·물류비·전기 등 비용 부담 증가(40.4%), 미국 수입 관세 부과(17%) 등이 뒤를 이었다.

업태별로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모두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마트(75)는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을 경기 악화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 백화점(50) 역시 미국의 관세 인상, 내수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체감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59)은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다이소 등 경쟁 체널 등장으로, 슈퍼마켓(91)은 고물가 영향으로 소용량·다빈도 구매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악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소비 시장 회복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55.3%가 ‘2026년 이후’라고 답했으며 ‘2028년 이후’는 19.1%, ‘올해 하반기’는 15%, ‘2027년 이후’는 10.6%로 답했다. 국내 소비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달 광주·전남의 고용지표도 악화됐다. 광주는 모든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줄었고, 전남은 전통적인 농림어업마저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이날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취업자

수는 77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79만 1000명) 대비 1만 9000명(2.4%) 감소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채용 위축 등으로 고용률 역시 1.4%포인트(p) 내린 60.4%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2000명(6.0%) 증가했고, 실업률도 0.2%p 오른 3.1%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7000명), 농림어업(-6000명) 등 모든 분야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수 자체가 줄었다

는 점을 시사한다.

일자리 질 악화는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광주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3.6%) 줄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7000명(4.8%), 2000명(7.7%) 늘었다.

전남지역도 고용지표 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전남지역 내 취업자 수는 10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 줄었으며, 실업자 수는 2만 4000명으로 1000명 늘었다. 이에 따른 고용률은 65.8%로 전년 대비 0.7%p 하락했고, 실업률은 0.1%p 오른 2.3%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 등은 취업자가 증가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명), 농림어업(-6000명) 등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상용근로자는 2만 8000명 줄었고, 임시근로자가 500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질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소매·유통업의 체감 경기는 지속적인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물가 관리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아, 2030년 판매목표 하향...투자는 5년간 42조 ‘사상 최대’

친환경차·전기차 판매 목표 현실화

기아가 중국 시장 부진을 고려해 2030년 중장기 목표를 당초보다 11만대 적은 419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친환경차 판매 목표도 15만대 감소한 233만3000대로 변경했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5개년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기아는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이같은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기아는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를 419만대(시

장점유율 4.5%)로 설정했다. 지난해 발표했던 430만대보다 11만대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판매 목표는 322만대, 2027년은 375만대다.

지역별 목표는 2030년 미국 101만대(시장점유율 6.1%), 유럽 77만4000대(5.0%), 인도 40만대(7.4%), 국내 58만대(36.3%)다.

2030년 친환경차 판매는 전기차 125만9000대를 포함해 233만3000대(56%)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판매 목표는 지난해 발표 수준(2030년 248만2000대)보다 약 15만대 감소했고 전기차 판매 목표는 기존 160만대에서 34만대가량 줄었다.

기아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종전 5개년 계획

(2024~2028년 38조원)보다 4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기아가 역대 발표한 5개년 계획 가운데 최대 규모다. 42조원 가운데 미래 사업 투자분은 19조원이다.

기아는 또 2030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15종으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는 10종의 라인업을 완성해 99만3000대까지 판매하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공간을 혁신하고 시간을 가지 있게 만드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내실을 강화하고 자동차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브랜드의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노란우산·신한은행,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원

신규 가입자 2만5000명에 10만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신한은행은 “내수 침체 장기화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생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계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장기화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신한은행을 통해 노란우산

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상생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노란우산 가입 업무 대행을 맡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 수는 29만여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중 실적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빈집 많은 지역 개발사업 용적률·건폐율 완화

빈집 방지하면 강제 철거·이행강제

정부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은 조속히 철거되도록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

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먼저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 지원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변경과 복합용도 활용도 검토한다.

민간 사업자가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금액을 명확히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D램 점유율 1위

고대역폭 메모리 압도적 우위

SK하이닉스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점유율 36%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 34%, 마이크론 25% 순이었다.

SK하이닉스는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70%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D램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됐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D램 공급업체의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9.3%로 1위를 차지했으며, SK하이닉스가 36.6%로 추격했다.

HBM 수요가 유지되는 한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는 점유율 구도는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발 관세 장벽에도 HBM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발 무역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HBM 시장 성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전

망했다.

HBM 시장을 이끄는 SK하이닉스는 현재 주력인 HBM3E(5세대)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공급 중이며, 후속 제품인 HBM4(6세대) 12단 제품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샘플을 공급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올 하반기 제품을 양산하고 향후 HBM4E 개발에도 속도를 내 HBM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도 경쟁력 회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는 엔비디아 공급망 합류에 시도하고 있으나, 1년 넘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는 상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93.70 (-40.53)
↓ 코스닥	643.39 (-15.06)
↑ 금리 (국고채 39년)	2.434 (+0.021)
↑ 환율 (USD) 〈오후 5시 10분 기준〉	1476.80 (+3.60)

3월 은행 가계대출 1.4조 ↑ ...증가폭은 2월의 절반 ‘뚝’

은행 기업대출 2.1조원 줄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2월에 이어 두 달째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2월 말보다 1조4000억원 많은 1145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이 2월(+3조 2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축소됐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09조 9000억원)이 2조2000억원 불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4조2000억원)은 9000억원 줄었

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말과 연초의 주택거래 둔화, 신학기 이사 수요 해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경우 분기 말 상여금 유입과 부실 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계속 줄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2~3월 주택거래가 늘어난 영향은 2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금융 여건 완화,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재부각,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둔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비롯한 정부 대책

효과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향후 가계대출 흐름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3월 가계대출 잔액(1672조2000억원)은 전월보다 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증가 폭(4조2000억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은행(+1조4000억원)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금융권(-1조원) 가계대출은 오히려 줄었다. 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9000억원)의 감소 폭이 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